

생산자 책임 재활용제도 2002년 시행

폐기물 발생을 대폭 줄이고 자원화를 촉진하기 위해 포장재나 가전제품 등 폐기물을 다량 발생시키는 제품의 생산자에게 폐기물을 회수해 재활용토록 하는 '생산자책임 재활용제도'가 2002년부터 시행된다.

또 2005년까지 농어촌지역 상수도보급률이 현재의 배수준인 55%로 높아져 그동안 상수도 혜택을 받지 못했던 2백여만 주민들의 식수난이 해소되게 된다.

김명자(金明子)환경부장관은 지난 2월 17일 오전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환경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금년도 업무보고를 통해 현재 도시지역의 상수도 보급률은 90%이상인데 비해 농어촌 지역의 상수도 보급률은 25%에 불과해 2백여만명의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김장관은 이를 시정하기 위해 2005년까지 모두 4천 892억원을 들여 122개 농어촌지역의 상수도보급률을 55% 수준으로 높일 것이라고 보고했다.

특히 운반급수, 우물, 빗물 등에 의존해온 섬지역주민들의 극심한 식수난을 해소하기 위해 920억원을 투입, 해수담수화시설과 암반관정 등을 개발해 상수도보급률을 2003년까지 45%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현재 섬지역의 상수도보급률은 15% 수준이다.

김장관은 이와 함께 상습적인 가뭄이나 수질오염 등으로 식수원이 부족한 오지주민들을 위해 오염되지 않은 산간계곡 등에 하루 용수공급량 3천600 - 1만2천t 규모의 소규모 식수전용저수지를 건설해 청정상수원 확보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이미 지난 98년까지 전국 60개소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마친데 이어 올 상반기 중으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2011년까지 식수전용저수지 60개를 건설할 계획이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와 관련, 김장관은 올해중에 관련 법령을 개정한 뒤 내년에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2002년부터 유리병, 종이팩, 금속캔, PET병 및 제품 포장재, 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컴퓨터, 타이어, 윤활유, 전지류

등 20개품목을 대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장관은 또 환경산업을 중점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유망환경벤처사업을 발굴, 육성하는 한편 대외경제협력기금 등을 이용해 환경업체의 해외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폐기물예치금 반환을 저조하다

수거 쉽지않고 처리비용 비싸 업체들 꺼려 폐기물의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가전제품과 종이팩, 타이어 등에 부과하는 폐기물예치금의 반환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지난 98년 업계가 환경부에 낸 폐기물예치금은 모두 400억8천만원인데 비해 반환액은 173억5천 492만원으로 나타났다고 지난 2월 19일 밝혔다. 이에따라 반환율은 43.3%에 그쳤다.

종이류의 경우 예치액은 15억9천690만원이었으나 반환액은 1억4천75만원으로 반환율은 8.7%에 머물렀다. 가전제품은 예치액이 141억5천941만원이었으나 반환액은 10억 2천886만원에 불과해 반환율은 7.3%로 집계됐다.

타이어류 역시 예치액은 23억8천92만원이었으나 반환액은 2억8천581만원으로 반환율은 12%에 그쳤다.

이처럼 종이류, 가전제품 등 일부 품목의 반환율이 저조한 것은 수거가 쉽지 않은데다 처리비용이 만만찮기 때문으로 환경부 관계자는 분석했다.

환경부는 이에 따라 예치금 요율이 낮아 반환율이 저조한 것으로 판단되는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현재 회수처리비용의 30%선인 예치금을 50%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폐기물예치금제도는 재활용이 가능한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가 해당제품의 회수와 처리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정부에 예치한 후 회수처리율에 따라 반환받는 제도로 지난 92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외국기업 국내업체 M&A때 환경문제 거론

외국기업들이 한국기업을 인수·합병(M&A)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들로부터의 소송 등을 우려해 환경실사보고서 등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과정에서 일부 국내업체는 매각가격을 대폭 깎인 것으로 알려져 이 문제가 새로운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지난 2월 23일 환경부와 김&장 법률사무소에 따르면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로 들어간 지난 97년말부터 지난 1월말까지 한국업체에 대한 외국업체들의 M&A사례 1백여건을 분석한 결과 해당 외국업체들이 인수대상 기업 공장부지의 토양오염 실태, 대기·수질 오염배출실적, 폐기물 처리현황 등을 요구했다.

H그룹의 한 계열사는 작년 외국업체와의 매각협상 때 석유화학 공장 부지 내 지하탱크 인근지역에서 유기용제로 인한 토양과 지하수 오염 사실이 밝혀지자 상대방체로부터 오염지역 복원을 요구받았다.

상대업체는 또 한국에서는 토양오염물질로 규정되지 않았지만 미국, 유럽 등 선진국에서 발암물질로 규제받고 있는 휘발성유기용제로 인한 오염문제까지 거론하는 바람에 결국 가격이 대폭 깎여 매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외국업체도 국내업체와 M&A작업을 벌이는 과정에서 대기·수질 오염물질 배출 및 환경투자실적, 토양오염 실태, 과거의 환경소송 유무 등에 대한 자료까지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환경부 관계자는 "외국업체들이 환경문제를 매각조건외의 1순위로 들고 나오는 것은 향후 지역주민들로부터의 집단소송 등을 우려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면서 "이를 계기로 기업들이 환경오염문제에 더 신경써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업체 환경경영평가제도 마련키로

2002년부터 적용...친환경경영 유도

환경부는 기업의 친환경경영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분야별 오염물질 관리체계 수립 여부, 환경 분야에 대한 연구 개발(R&D) 예산규모, 환경전담조직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제도를 마련하기로 했다고 지난 2월 23일 밝혔다.

환경부는 이를 위해 내년중에 환경친화기업 및 자율환경관리제도, 환경회계, 환경감사제도 등 기업의 환경경영 전반을 평가할 수 있는 다양한 기법을 개발해 빠르면 2002년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 1990년대초부터 선진국을 중심으로 기업의 환경경영성과 평가체계 구축방법이 논의되기 시작하면서 최근에는 국제적인 표준방안 마련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면서 평가제도 마련과 도입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환경부 이필재 환경경제과장은 "선진국을 중심으로 그동안 규제중심의 환경정책 수단이 자발적 참여중심으로 변하고 있어 특히 기업체의 환경경영성과에 대한 자발적인 공개, 검증, 평가가 주요 정책수단으로 부상했다"면서 "한국도 이런 추세에 맞춰 미국, 일본, 스웨덴, 덴마크 등 선진국들의 사례들을 참조, 선진형 평가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과장은 이 제도를 도입하면 ▲ 기업경영에 환경요인이 고려되도록 함으로써 자율적인 환경관리체계의 정착을 유도하고 ▲ 외국업체와의 인수합병(M&A) 과정에서 기업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으며 ▲ 주식시장 등 금융시장에서 기업의 객관적인 자산가치를 평가받을 수 있어 궁극적으로 기업경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2002년부터 보급할 저공해차량에 사용할 경우 휘발유차량
은 전체자동차 오염물질배출량의 11%, 경유차는 20%이
상 저감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전국에 보급하기로 했다.

수자원정책 수요관리 위주로 전환

2006년이상 물부족사태 대비 종합대책 마련
정부의 수(水)자원정책이 공급위주에서 수요관리 중심
으로 바뀐다.

환경부는 빠르면 2006년께부터 예상되는 물부족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수자원 정책의 기초를 종래의 공급위주에
서 수요관리 중심으로 바꾸는 것 등을 골자로 한 '물절약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지난 3월 6일 밝혔다.

환경부는 종합대책에서 우선 국가 차원의 물 절약 기본
목표를 설정해 2006년까지 수도물의 경우 연간 전체생산
량(58억4천만t)의 13.5%인 7억9천만t을 절약한다는 계
획이다. 이는 섬진강댐 2개를 건설해 물을 확보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양이다.

환경부는 또 2004년까지 724억원을 투입해 신축건물
을 포함해 전체건물의 70%까지 절수기기를 설치하는 한
편 수도요금 누진제를 적용해 일정량 이상을 사용하는 경
우에는 수도요금을 대폭 인상하고 일정규모 이하일 때는
대폭 할인해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 하루 물사용량이 500-2천t 규모인 물 다
량 사용건물에 대해서는 사용한 물을 다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중수도시설 설치를 의무화 하고 ▲ 노후수도관을 대
폭 교체하며 ▲ 서울 등 월드컵 개최 6개 도시에 빗물이용
시설을 설치해 화장실 세정수 등으로 사용하게 하고 ▲ 상
습 가뭄지역에 대해서는 식수원 개발과 함께 절수기기를
설치하기로 했다.

또 절수기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개발업체에 대해 세
제, 금융지원을 확충하고 물 절약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전국에 보급하기로 했다.

또 절수기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개발업체에 대해 세
제, 금융지원을 확충하고 물 절약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작년 환경오염업소 적발건수 급증

총 7,191개소로 98년 비해 444건 늘어
작년 한해 환경오염행위와 관련해 적발된 업소수는 모
두 7천191개소로 지난 98년에 비해 444건이 늘어난 것으
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작년에 전국 12만2천118개 업소를 대상으로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조사에 나서 이 가운데 7천191개업
소(5.9%)를 적발해 고발조치하거나 개선명령, 조업정지
등 행정처분했다고 지난 3월 13일 밝혔다.

적발된 업소들의 위반행위를 보면 배출허용기준초과가
3천24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기타(1천844건),
무허가배출시설 설치·운영(1천456건), 방지시설 비정상
운영(649건) 등의 순이었다.

이 가운데 무단방류 등 방지시설을 비정상적으로 운영
하다 적발된 것은 649건으로 전년의 475건보다 36% 증
가했다.

특히 수사전담요원으로 지정된 환경특별사법경찰관이
858건을 직접 수사해 검찰에 송치했으며 이 중 12건의 환
경사범에 대해서는 구속수사했다고 환경부는 밝혔다.

환경부 관계자는 "96년에 비해 적발건수의 경우 444건,
수사건수는 297건에서 858건으로 2.9배나 각각 증가한
것은 2회 이상 민원을 유발한 업소와 특히 4대강 상수원유
역의 수질오염업소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벌인 결
과"라고 분석했다. ◀